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1. 14.

폐지 2023. 7. 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 중 내부공익신고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처리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공익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본교의 부패행위를 총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 등의 접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1. 신고자가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신고된 부패사항이 본교로 이첩된 경우
3. 본교의 부패사항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감사담당부서로 이첩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4조(신고 사항의 확인) ①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이첩)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른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대상자 등의 의견진술) ①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신고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진술기회 부여 및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서면 통지 없이 할 수 있다.

제7조(신고·확인 등의 편의 제공) ① 신고자가 특정한 장소 또는 특별히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가 요청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신고자, 신고대상자, 관계 공직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비밀보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신고의 편의를 위해 감사담당부서 내에 신고를 위한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취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때,

취소 이유가 타당한 경우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취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신고 사항의 부패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고 사항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 사항의 처리) ①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감사 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심의 결과는 결과처분서로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결과처분서의 내용 중 신고대상자, 관계 공직자, 참고인, 관계 기관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에 제18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감사 규정」을 따른다.

### 제3장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등

제11조(비밀 보장의 공지) ①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신고자 등의 신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음을 본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신분 비밀 보장 등)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 등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직원 중 신고의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임명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 사진, 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을 알 수 있는 신고서, 증거 등 신고·조사 관련 자료

3. 그 밖에 신고자 등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사항

제13조(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의 신고 또는 진술 등으로 인해 조직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근무평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사 등에서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장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제14조(포상 및 보상) ① 총장은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본교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4명 및 위촉직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기획평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감정평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인, 관련 공직자, 조사담당자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신청인, 관련 공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보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보상금의 지급사유,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제한, 보상금 신청 및 접수 등,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절차 등, 이의신청의 접수·처리, 지급시기, 보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제268호, 2015. 1.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5호, 2023. 7.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